

大學의 量的 發展과 質的 統制

李 鉉 清
(釜山大 教育學科)

1. 序 言

韓國 大學은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量的인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대학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떤 연령 집단에 어느 정도 교육시켜야 하는가는 文化와 社會的 價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보면, 量的 發展과 質的 統制 간의 不調和現象이 상존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大學教育의 質的 管理의 실패는 물론 지나친 양적 팽창에 의한 교육 인플레이션(educational inflation) 현상까지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사회적 개혁과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때만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은 인력 수급 일변도의 '한국화된 교육(Koreanized education)'의 특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양적 확충에 치중되어 온 느낌이다. 1980년에 들어와서는 특히 대학 정원 倍增,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 및 대학 자율화 등의 시책 등으로 질적 통제면에서나 양적 발전의 측면에서 대변혁을 경험해 왔다. 특히 국가 발전과 고등교육의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교육의 양적 발전과 교

육 기회와 확충 그리고 질적 통제와 선발 및 분배의 관리 문제는 어느 국가의 高等教育에서든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量과 質의 적절한 조화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선발과 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교육의 양적 肥大는 어떤 면에서는 질적 통제 기능의 상실을 의미해 왔고, 한국 교육 문화의 독특한 특성과 함께 學歷主義(credentialism)의 성향과 학위 생산 공장(diplomamill)으로서의 대학 역할을 담당해 온 기현상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지난 '60년대 이후 양적 팽창은 지속되어 온 반면 질적 관리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부응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예로서 1989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령별로 보아 40대의 9%만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졌던 데 반해 30대는 11%, 20대 후반은 13% 그리고 20대 초반은 18%가 대학교육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 기회와 지속적인 확대 결과는 人口 10만명당 대학생 수가 2,680명(1983년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대학교육의 소산이 무엇이었던 숫자상으로 볼 때 과도한 양적 팽창을 해 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질적 통제와 관련된 시설면이나 교수의 자질, 도서관 시설 및 교원당 학생 수의 통계를 감안해 보면 질적인 성장은 오히려 퇴보

한 실정이다.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질적 관리와 양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적인 면에서는 과잉 교육(the overeducated)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면에서의 과소 교육(the undereducated)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질적 통제와 양적 팽창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 보고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平等이나, 卓越性이나? (equality or excellence?)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는 '현대 사회에서 지성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민족은 파멸의 운명을 맞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퍼킨스(J. Perkins) 또한 대학의 연구·교육·봉사의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은 지식의 생산과 분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어떤 양태의 지식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느냐에 따라 질적 통제 기능과 양적 성장 기능의 효율적인 조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볼 때 지나치게 외현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내적인 충실에는 많은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고등교육은 量的으로는 1950년 이래 지속적인 팽창을 해오고 있으며 학생 수와 취학률 및 진학률은 신장된 반면 대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이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오히려 저하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학생의 질적인 통제를 위한 학사 관리상에는 물론 학위의 公信力과 관련된 졸업자의 질적인 통제와 졸업 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등주의적 관점이나 혹은 탁월성의 추구이나의 관점은 항상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고등교육 정원 정책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정원 정책은 4 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¹⁾

첫째 단계는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의 개방적·방임적 고등교육 정원 정책을 추구하던 시기로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의 설립을 권장하며 양적인 팽창을 주도하던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의 대학 설치 기준령 제정 단계로 대학의 난립과 무제한적인 대학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려던 시기이다.

셋째 단계는 大學學生定員令 시행 단계로 1965~1980년까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의 실시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실험대학 운영 등을 통한 산업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던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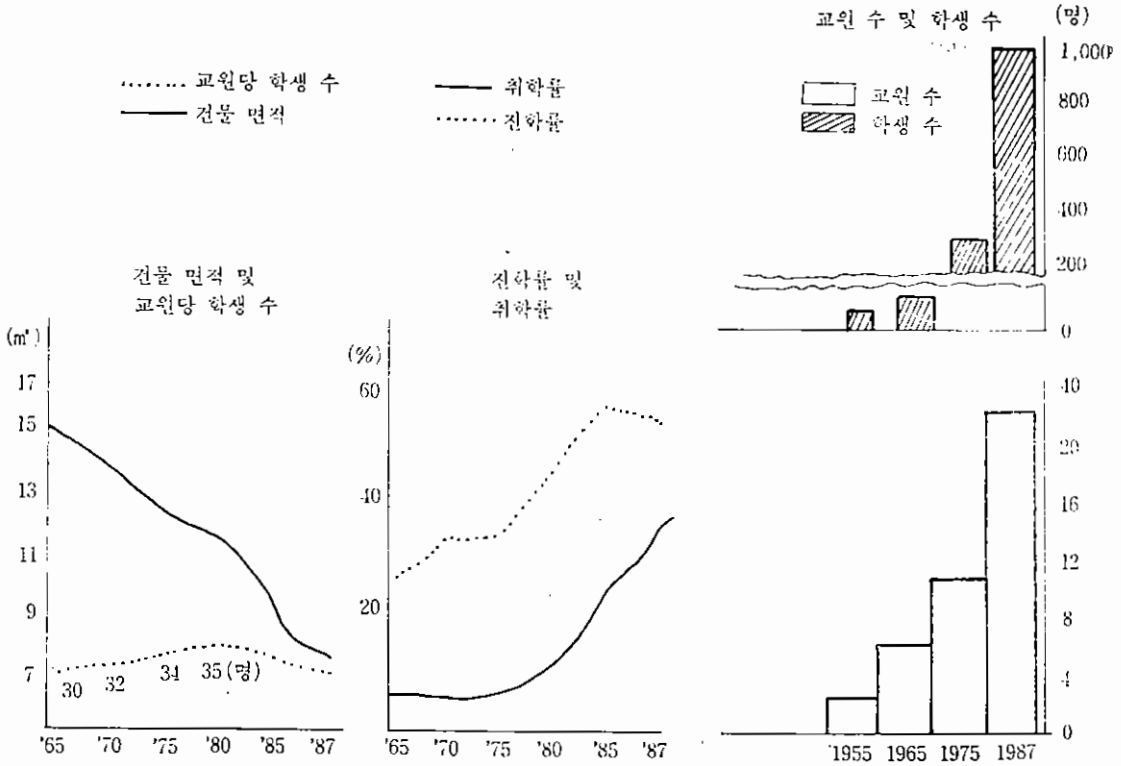
네번째 단계는 1981년 이후의 대학 졸업 정원제의 운영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학 졸업자의 질적 통제와 양적 규제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근래 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살펴 볼

<표 1>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

연도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진학률	취학률	1인당 건물 면적	교원 1인당 학생 수
1955		84,996	74	—	—	—	32.4
1970		163,511	152	34.5%	9.3%	14.3m ²	18.8
1975		235,147	189	33.1%	9.8%	12.3m ²	20.7
1980		565,007	224	47.1%	17.2%	11.5m ²	27.9
1985		1,260,350	231	59.1%	35.1%	8.3m ²	35.8
1987		1,270,017	233	55.2%	37.3%	—	34.5

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고등교육 정책 연구, 1985년 연구보고서, pp.225~227.

〈표 2〉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



때 정부 나름대로는 대학의 정원과 질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나 정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고 고등교육에 대한 양적 성장의 준거가 미비한 탓으로 양적 팽창이나 질적 관리 모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개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통제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교육 문화(educational culture)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과잉 경쟁과 과열 교육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문화 속에서는 대학 정원 정책의 양적 규제도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겠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의 과다는 재수생의 누적이라는 사회 문제 이외에도 졸업 후의 고등 실업군을 量産함으로써 신중의 사회 계층(new underclass)을 형성시키게 되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의 대학 졸업자의 보편화와 우대 성향은 또다른 고학력 지향 성향을 창출해 내어 학력간 임금 격차의 심화뿐만 아니라 맹목적 고학력 지향 중후가 보편화됨으로써 질적 관리나 양적 통제의 조화를 저해하게 된다. 한국인의 도구적 교육관은 특히 대학 졸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열병(educoholic fever)이나 시험 중독(testholic tendency)의 병리적·교육 문화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정원 정책 준거 설정의 곤란은 물론 정원 관리의 합리성 결여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질적 통제의 해결 없이는 대학교육의 所産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입시를 위한 재수와 취업을 위한 재수 문제는 대학의 바람직한 양적 발전과 질적 통제

가 이루어지면 자연 해결될 수 있다 하겠다. 고등교육의 맹목적 평등 추구는 고등교육의 인플레이션(educational inflation)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며 지나친 질적 통제 또한 엘리트 중심주의적 교육 디플레이션(educational deflation)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결국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사회의 인력 수급에 따른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 보여지기 때문에 양적 발전에 부응하는 질적 관리의 문제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양적 발전과 질적 관리(quality with quantity)'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89년 초를 기준해 볼 때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1.9명으로 1970년의 18명에 비해 더욱 악화된 실정이고 전국의 전임 교원 수 23,723명에 버금가는 21,047명의 강사에 의해 대학 강의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²⁾을 주목해 본다면 분명 몇 가지 쟁점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고등교육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발전'의 이론과 전략의 관계 속에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양적 발전을 해온 것은 1960년대 이후 개발과 경제 성장주의 정책에 힘 입은 바 크다고 볼 때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통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시기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 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양적 팽창이나 교육 기회의 확대 결과는 개인에게는 실업을 가져다 주었으며 국가에게는 지나친 재정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³⁾ 1989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등 실업자가 12만 8천 명이라는 수치를 볼 때도 고등교육의 효율성 문제는 질적 관리의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비록 이

러한 실업이 마찰 실업이나 구조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난'과 '구인난'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대학교육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통제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전의 의미가 의도적 變化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의 질적 통제는 단순히 양적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분배 상황에 관한 의미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量的 增加에 따른 외현적 평등화보다는 地域間·계층간 또는 과정간의 大學 層化現象이 해소될 수 있는 질적 관리가 요청된다.

둘째는 고등교육의 過程이나 內容 그리고 專攻間의 합리적 조정과 입시 제도 등을 포함한 선발 기능과 定員管理의 합리적인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대학 정원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공간·지역간 그리고 남녀간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질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한국 대학의 양적 팽창과 질적 통제의 실패 요인은 대학 입시 제도의 일관성 결여와 학생 선발 방법의 합리성이 결여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때 대학 단독 관리 제도와 국가 공동 관리 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질적 통제가 가능한 선발적 기능 이외에도 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질적 통제는 결국 입시 선발 제도와 졸업 제도 및 학습 과정과 모두 연관된 것이므로 선발 과정에서 고등교육 수학 능력이 올바르게 측정되어야 함은 물론 선발 제도 자체와 대학 입시 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는 질적 통제와 양적 조정을 위한 학사 관리와 졸업 제도의 재검증이 요구된다. 학사 관

2) 조선일보, 1989년 9월 19일자 지면 참조.

3) I. Fagerlind & L.J. Saha,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Pergamon Press, 1983), pp.4~6.

리와 졸업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통제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입시 제도가 대학교육 이수 전의 질적 관리라 본다면 학사 관리는 대학교육 이수 과정에서의 고등교육의 질적 통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관리를 통한 엄격한 질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한국과 같이 양적인 면에서 개방적인 교육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와 졸업 자격의 질적인 통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결국 대학의 질적 통제는 입시 정책이나 정원 정책 그리고 졸업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졸업 정원 제도나 학사 관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통제 기능 또한 원활치 못한 편이다. 특히 고학력 지향 현상의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비교적 고등교육 수학 능력이 문제시되는 학생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화가 우려되고 병리적 교육 문화의 영향으로 대학교육이 도구적 교육화(instrumental education)로 정착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지위추구적이고 이질적인 대학 기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졸업 정책의 부재 그리고 학사 관리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 현상마저 배제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는 敎育課程의 편성과 운영의 문제에 따른 질적 통제와 양적 발전의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양적 팽창에 부응하는 시설이나 교수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선택의 폭이 부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 시간의 부족 현상 등에 따른 전체적인 고등교육 질의 저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물론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 커리큘럼 간의 연계성의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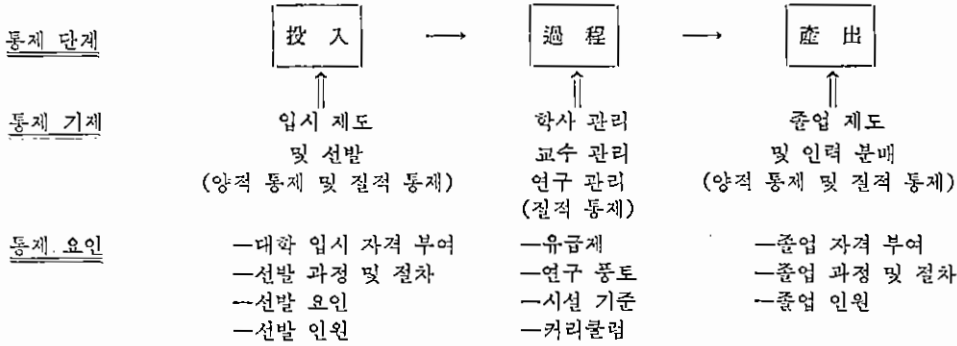
특히 양적 팽창에 따른 일시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시설 및 교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교과과정 편성·운영의 철학은 물론이러니와 사회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내용의 사회적 적절성의 문제, 교과 운영 과정에서의 지나친 학과 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 교육과정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재검증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 없이는 고등교육의 質向上은 물론 학위 과정에 대한 공신력의 관점에서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다섯째는 교수 활동과 연구 활동에 관련된 관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앞서도 지적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부족한 실정이고 많은 경우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교수의 책임 시수와 담당 과목만을 볼 때 4.3 과목과 12.2 시간으로 나타난 점⁴⁾은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또한 강의실, 실험실의 평균 활용 비율도 1985년을 기준해 볼 때 21.43%에 불과하며 도서관 시설의 경우에도 1985년을 기준해 볼 때 모두 298개 도서관에 15,426,000권의 장서 보유로 미국의 1/34 정도에 그치고 있어 (UNESCO 통계연감 참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연구 풍토도 교수 사회의 폐쇄적 풍토와 학문 연구 의욕의 저하 때문에 학문적 발전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지금껏 고등교육의 평등과 탁월성의 관점에 더해 다섯 가지 전제 요인들을 검토해 본 바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 발전은 지속적으로 해 온 반면 질적 통제는 거의 확립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통제는 뒤에 圖示된 바대로 입시와 졸업의 양적 통제 외에도 학사 관리와 過程 통제(process control)를 통해 가능하다 하겠다.

4) 강우철외, 전국 대학 교수 자원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4.

〈표 3〉 대학교육의 질적 통제와 양적 관리 모형



3. 大學教育의 發展方向

대학 발전의 의미는 量的 發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 발전의 의미는 양과 질의 적절한 조화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은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통제를 그 주요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만(Free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잉 교육 인간(overeducated man)은 산업 체제와 직업 구조의 관점에서 고학력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은 프리만의 과잉 교육 인간에 부합되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적인 면에서의 고학력도 문제시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저학력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질적 통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학교육을 대학 캠퍼스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주어진 기간에 받아야만 된다는 교육적 고정 관념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양적 발전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문화에 기인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맹목적인 학력주의(blind degreeocracy) 문화를 개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맹목적인 학력주의라 지칭하는 이유는 콜린스(Collins)가 ‘학력주의 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학력이 기회 평등에 기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기존 계층 구조를 심화·재생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

이다. 특히 우리 교육 문화에서 인식되고 있듯이 학력이 일종의 사회 신분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학교육의 건전한 정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진적 脫學歷이나 脫高等教育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나친 양적 팽창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질적 통제의 불가능을 초래케 하여 고등교육 인구 규모와 사회 인력 배분 과정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대학교육의 양적 발전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고등교육만을 추구하는 교육적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대학교육 발전 방향 이외에도 대학교육과 대학 기능의 측면에서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왜 사회에서 대학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른 양적 팽창은 어느 수준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철학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현실로 보아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대중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 여겨진다. 이때 대학교육 인구의 확대에 따른 下向的 平準化의 대학교육을 발전적 대학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적 확대와 질적 통제를 병행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양적 확대와 질적 통제의 조화가 어렵다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多樣性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제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보완 작업을 지속할 때에 대학교육의 2E(equality and excellence)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후기 산업 사회의 도래는 직업 구조나 사회체제의 변모 등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 경향을 유발할 것이므로 대학에서 양성되는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른 장기적 대책과 아울러 질적 관리 체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 위기론이 대두된 것이 이미 오래 전 일이지만,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때 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학의 위기’는 양적 팽창에서도 기인될 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에서도 기인되기 때문이다. 퍼킨스(Perkins)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학의 위기 요소는 數의 위기, 財政의 위기, 우선 순위의 위기,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따른 위기 및 대학의 존재 자체에 따른 위기 등을 들 수 있다.⁵⁾ 이러한 위기 요소를 감안해 볼 때, 사회적으로 대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위기에 봉착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대학이 質적으로 충실치 못할 때 그리고 대학교육의 목표가 왜곡되었을 때 또한 대학교육이 도구적 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쳐 사회적 지위 표상이나 상품화되었을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환언하면 질적 통제와 양적 발전이 부적절할 때 위기 요소는 가중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발전적 대학교육의 정립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도구적 교육에 대한 철학이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심한 이유는 구조적인 변인과 선택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교육이 경제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신념에 따른 발전교육적 관점 때문이다. 예컨대 학력사회 성

향, 학력간 임금 격차 등의 요인에 대학교육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까닭이다. 그 이유야 어쨌든 양적 팽창이 과도했으며 이에 부응하는 질 관리의 과제가 우리의 연구 과제인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개진해 왔는데 무엇보다 질적 통제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교육 제도나 운영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 지옥과 취업 지옥 등의 구조적 개선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직업 구조의 장기 전망과 아울러 대학교육 기회와 다원화와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교육관과 가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전공에 대한 盲信, 一流病, 高學歷病 등의 고질적인 교육 병리 현상에 대한 해소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 교육 체제의 확충을 통한 양적 조정이 필요하다. 생애 교육을 통한 ‘점진적 고학력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경험 중심 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획기적인 大學教育의 개편이 필요하다. 양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성인 중심 대학(andraversity)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넷째, 고등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을 위한 한국 교육 문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교육과 유용한 지식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교육에 취한 국민(educogenic people)’ ‘시험에 취한 학생(testholic student)’ 그리고 ‘恨풀이 교육’이 지배하는 교육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때 대학 체제 연구, 교육 인구학적 연구 및 교육병리학 연구 등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의 질적·양적 조정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학의 양적 발전과 질적 통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否的인 力動關係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 노력과 적절한 제도에 의해서만 이 과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

5) James, A. Perkins, "The Changing University: Five Crises of the World's Universities", *Dialogue*, Vol. 6, No. 3, 1973, pp.3~17.